민주, 중도 우클릭…강령서 '한미FTA 재검토' 빼

성장·안보·北인권 명시 검토…논란 예상

당명 '민주통합당'→'민주당' 변경 추진도

민주통합당이 중도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5·4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 및 정강정책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당의 노선을 중도 지향으로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또 보수적 상징인 성장이나 튼튼한 안보, 북한 인권 등도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도층 이탈이 대선패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합치는 과정에 삭제됐던 '중도주의 노선'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산하 강령·정책분과위는 15일 비공개 워크숍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복지 등 3대 지향점의 기조를 유지하되 각론에 있어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미 FTA와 관련,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문구 대신 한미 FTA로 국한하지 않은 채 'FTA 등 통상정책에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피해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문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 핵심 가치를 그대로 살리되 당의 '반 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지원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바꾸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식으로 성장 개념을 보강키로 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선별적 복지'와 이분법적 대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 분야와 관련, 종북주의 논란을 피하면서 안보 이미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튼튼한 안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금기시 했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문구를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진보 노선을 선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 수렴도 없이 대선에 패배했다는 명분으로 정체성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진보 보다는 중도 쪽으로 방점을 찍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진보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대준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고 당헌 1조를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문구로 개정을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6일 오후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용섭(왼쪽부터), 김한길, 강기정 후보가 손을 들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막말 난타전

재보선 혼탁·과열 양상

네거티브 전략 잇따라

4·24 재·보선이 중반 레이스에 들어서면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 카드가 나왔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전날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행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개미투자자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16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동안 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이 공존과 공익이었다"면서 "구태의연한 비방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원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인덕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안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먼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새 정치를 노원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새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며 "왜 하등 연관성이 없는 노원에서 애매모호한 일을 도모하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새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며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노원은 우리나라 서민·중산층의 대표적 고민을 안고 있어 새 정치를 이루기에 정말 적합한 곳"이라고 맞섰다.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은 정치 신인에 가까운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보다는 지원 유세에 나선 문재인 의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일대일 구도 형성을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의 '무연고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변변한 정책 경쟁 없이 야권 단일화에만 올인했다"면서 "국민에게 심판받은 사람이 또다시 선거판에 기웃거릴 게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무성 후보는 남구에서만 4선을 하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 말을 바꿔서 다시 출마했다"면서 "여당은 부산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으로 얕잡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박지원, "장성 진급 호남 출신 배제" 지적에

국방장관·육참총장 "그런 일 없게 철저 감독"

올해 장성으로 진급한 육사 기수에서 호남 출신이 배제된 것과 관련,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의원(목포시)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결정돼 올해 장성으로 진급한 육사 기수 가운데 유례없게 호남 출신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시정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금년도 진급 심사시에는 절대 간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도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특정 육사 기수에 대해 사려깊게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금년 진급에는 지역 균형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지적하고 "육사 출신이 장성에 진급하는데 지역 균형이 이뤄져야 추후 소장, 중장, 대장으로 진급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설특검 '제도특검'으로 가닥

법무부·검찰, 정치적 사건 특별검사 신속 임명케 법제정 추진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설특검을 '제도특검' 형태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특검'이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상설 특검과 관련,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형태가 아닌 제도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 보다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특검제가 도입되면 국민적 의혹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회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고 여야 간 정치적 다툼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과 관련해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는 증권범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도입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시스템은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임신·출산 여성 취업 혜택

'엄마 가산점제' 심의 착수

국회 환노위…형평성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의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엄마 가산점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넉 달 만인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군(軍)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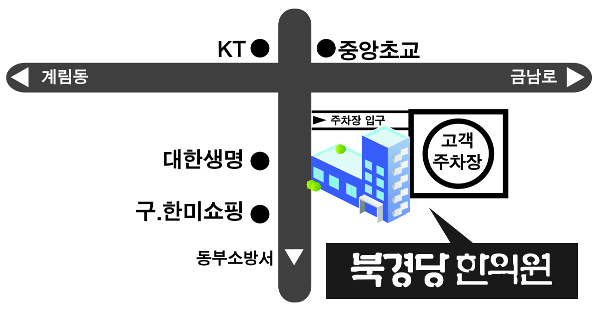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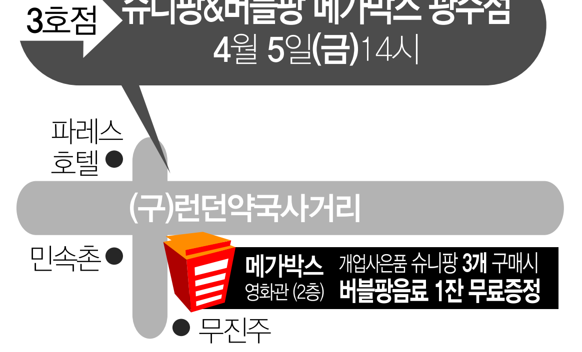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6월 현재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9.3%(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마 가산점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임대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6층고급주택
▶병/의원, 약국, 커피숍,편의점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매매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매매가 14억 5천만원
▶분할매매가능
문의 011-611-9525 / 010-3605-5000